

“북미 간 종전선언 합의 가능성”

靑 “어떤 형태든 정부 환영
평화협정 체결 향한 입구
협정 체결엔 다자체제 필요
비핵화 마지막 단계서 협정”

청와대는 25일 2차 북미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 “북미 사이에 종전선언이 합의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북미 정상회담 의제에 종전선언이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 “종전선언의 형태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의 형식과 내용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며 “주체만 놓고 봐도 4차 남북미중, 3차 남북미, 2차 북미 등 여러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형식의 종전선언이라도 우리 정부는 환영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종전선언은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본질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이미 수교를 했고, 미·중도 40년 전에 수교를 했다”며 “남북은 두 번의 정상회담과 9·19 군사합의를 통해 사실상 종전선언과 불가침 선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남은 것은 북미다. 북미가 종전선언을 하면 실질적인 의미가 달성된다는 취지의 말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북미 양자만의 종전선언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더 중요한 것은 종전선언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순조롭게 이끌어내고 비핵화 속도를 가속화 하는 것, 그런 역할로써의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든 우리 정부는 환영”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물론 이견 정치적 선입견으로서의 종전선언”이라며 “평화협정을 맺는 데는 다자체제가 필요하다. 다자가 평화체제를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다자가 참여해야 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종전선언의 각 주체인 미중·한중·남북이 각각 수교를 맺거나 사실상의 불가침 선언을 했기 때문에 남은 두 주체인 북미 간에만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4차 종전선언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게 김 대변인의 설명이다.

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 “딱 두 나라, 북한과 미국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두 나라가 종전선언을 한다면 그것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전쟁을 치른 경험에 있는 4개 나라의 종전선언은 완성된다는 것을 말씀 드린 것”이라고 했다.

또 “그것으로 (평화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남북미중 4개국을 비롯한 다자간 평화협정을 맺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종전선언은 평화체제로 가기 위한 입구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한미간 협의의 상황과 관련해 “지금 평화협정에 대해 논의하거나 준비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평화협정은 상당히 복잡하고 구조적인 조항들을 담아야 한다. 비핵화 마지막 단계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2차 북미회담의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그 프로세스를 충분히 밟은 뒤에 마지막 단계에서 평화협정을 맺게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남북미중 4개국 정상 단위에서의 종전선언이 아닌 실무자급에서의 종전선언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 김 대변인은 “그것까지는 제가 자신할 수 없다”며 “북미 간 협상 결과가 나와 봐야 후속이 대해서도 이야기 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다.

김 대변인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정부의 준비 상황에 대해서 “북미 실무협상에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 정상회담에서 어떤 합의가 이뤄질지는 저희가 실무부처를 진단할 수 없다”며 “현재의 상태에서 북미 합의와 별개로 우리 정부가 따로 금강산 문제에 대해 준비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김정은 베트남행 열차이동 北 의전팀의 탁월한 선택”

탁월한 전 靑 행정관 호평

탁월한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이동편으로 열차를 택한 것에 대해 “북측 의전팀의 탁월한 판단과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탁 전 행정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일단 정상 이동편으로도 이미 화제를 만들었다”며 김 위원장의 열차 이동 선택을 호평했다.

이어 “역사에서의 사연, 북·베트남 열차 이동의 역사적 의미 등 충분한 스토리를 만들어 냈다”고 덧붙였다.

탁 전 행정관은 특히 “여기에 더

해 평양에서 출발하는 열차가 베트남까지 연결된다는 이 당연한 사실을 전 세계가, 특히 ‘우리’가 목격하면서 통일이 되면 부산에서 출발하는 열차가 평양을 걸쳐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와 연결될 것이라는 두근거림까지...”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동북아 철도공동체 구상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단지(?) 회담 참석을 위한 이동편으로 메시지를 주었다는 사실이 대단하다”며 “북미회담의 좋은 결과를 바라는 마음을 보탠다”고 덧붙였다.

한편 탁 전 행정관은 지난해 9월 평양 정상회담을 비롯한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과정에서 북측 의전 실무 담당자들과 구체적인 의전 내용을 여러 차례 조율한 바 있다. /뉴스

설훈 20대 발언 논란에 “머리 숙여 사죄”

민주 흥영표 원내대표, 한국당에 “국회 정상화 즉각 응하라”

흥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설훈 의원의 20대 민주주의의 교육 부제 발언 논란과 관련해 “원내대표로서 깊은 유감과 함께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 고개 숙였다.

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대 청년과 관련해 우리 당 의원들의 발언이 논란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대 청년은 미래를 책임질 주역이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우리 사회도 미래가 있다”며 “지금 20대는 구조화된 불평등, 미래 불확실성에 짓눌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운 대기업과 공공부문 취직, 부모 세대 성취에 따라 인생이 좌지우지되는 기회의 상실, 기득권의 세상에서 젊은이들이 절망하고 있다”며 “젊은 세대의 상상력과 활개를 짓누르는 상명하복 문화에 숨 막혀 하고 있다”고 했다.

흥 원내대표는 “그것이 20대 청년들의 근본적인 현실 인식”이라며 “20대의 현실 인식과 절망감에 대해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안타깝고 미안하다. 청춘이라는 말이 절망과 상실의 동의어가 되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20대와 청춘은 듣기만 해도 가슴 설레는 말이자 빛나는 이상과 희망을 꿈꿀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당정이 20대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함께 공감하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앞서 설 의원은 지난 21일 폴라뉴스와 인터뷰에서 “20대 남성 지지를 하라” 배경을 질문 받고 “이분들이 학교 교육을 받았을 때가 10년 전부터 집권세력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다. 그때 제대로 된 교육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한다”고 말해 논란을 자초했다.

이밖에 흥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의 2월 임시국회 무산 선언에 대해 “어떠한 조건도 내세우지 말고 국회 정상화에 즉각 응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뉴스

국민 62.2% ‘임시정부 수립’

4월 11일 임시공휴일 지정 찬성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인 4월1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이 임시 공휴일 지정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22일 CBS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에게 임시정부 수립일의 임시 공휴일 지정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 응답이 62.2%(매우 찬성 39.6%, 찬성하는 편 22.6%)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반대는 27.8%(매우 반대 12.2%, 반대하는 편 15.6%), ‘모름·무응답’은 10.0%다. /뉴스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간담회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25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간담회에 참석하여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을 돌아보고, 미래 100년의 준비를 다짐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배경은 충청 임시정부 요인들이 광복 후 청사를 떠나기 앞서 기념촬영한 모습.

靑 “3·1절 특사, 26일 국무회의 의결 직후 법무부에서 발표”

대상은 쌍용차 파업·집회 등... 정치인·음주운전 대상자 등 5대 중재 범죄자 포함 안돼

청와대는 3·1절에 특별사면 대상과 관련해 26일 국무회의 의결 후 법무부에서 최종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3·1절 특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명단은 청와대에 올라왔다”며 “내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에 법무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6일 오전 10시에 국무회의가 끝나면 의결 직후에 (법무부에서 발표)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특별사면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검토한 후,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친다. 이후 대통령이 최종 확정하고 공포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쌍용차 동차 파업 및 집회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광

우병 촛불 집회 참가 ▲세월호 참사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참가자 등을 사면 대상으로 검토했다.

정치인은 검토 대상 명단에 포함하지 않았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음주운전 대상자, 뇌물·알선수뢰·알선수재·배임·횡령 등 5대 중재 범죄자도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